

## 2022년 제1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개최결과

### □ 세미나 개요

○ 주 제 명 : 디지털 기록 생산체계 개선방향

- (사회) 이지영 연구관(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 (발표) 이젠타 서기관(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
- (토론) 양동민 교수(전북대학교), 백영미 과장(국가철도공단),  
윤정훈 사무관(대통령기록관)

○ 일시/장소 : '22. 11. 10.(목) 14:00~16:00 / 행정기록관 2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총 126명

- (내부) 국가기록원장, 기록정책부장, 부서장, 원내 직원 30명
- (외부) 토론자, 기록관리 관련 기관 담당자 등 96명

※ 중앙행정(26명), 지방자치단체(7명), 교육청(16명), 군기관(2명), 대학기관(6명), 영구기록물 관리기관(3명), 공공기관(33명), 민간업체(2명), 기록관리전문가협회(1명)

### □ 주요 논의내용

- 문서관리카드, 메모보고, 온나라 문서 2.0 등 디지털 기록 생산현황 및 문제점 파악, 기관 업무담당자 인터뷰 결과 분석 등
- 해외 디지털 기록 생산현황 조사, 국가별 기록(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 시청각기록 등) 관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① 다양한 기록 생산 포괄, ② 과제 중심의 기록 생산, ③ 편리한 기록 생산 지원, ④ 메타데이터 획득 자동화, ⑤ 이메일을 기록으로 관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기록 생산체계 개선방향 제시

### □ 향후계획

- 제1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개최결과 보고 : '22. 11. 15.
- 제2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개최(행정기록관 2층 세미나실) : '22. 12. 8.  
※ (주제명) 역사기록관 소장 17세기 태백산사고본의 종이재질 특성 연구

○ (양동민) ① ‘온-나라 중심으로 다양한 기록 생산’ 을 추진하는 데는 행정적인 장벽이 매우 높을 것임.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온나라 고도화의 실행방안은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 있고, 업무 수행팀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인지 궁금함.

=> (이철편) 현재까지는 연구용역에 집중하였고,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임. 올해 온나라 3.0 고도화와 함께 기록관리 생산체계 개선을 위해 온나라 관련 통계 데이터 등을 확보했지만,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확보되지 못한 상황임. 내년에 고도화 예산이 확보되면 기록관리 차원에서 ISP에도 참여하는 등 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함.

=> (양동민) 개인적으로도 가장 큰 장애는 예산 부분이라고 생각함. 예산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듯함.

② 현재 법령에는 디지털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디지털 기록에 대한 유형 분류와 각 유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기록관리 업무 관점에서 컴포넌트 같은 첨부물들의 파일 분류나 기록물 유형에 대한 정리는 업무 담당자와 연구자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임. 법령이 아니더라도 하위 레벨의 지침 등에서 유형 분류 및 정의에 대한 인지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이철편) 법령 개정이 용이치 않은 점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록이 계속 생겨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록물의 유형 분류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분류로서의 유형 분류가 기록 관리 영역에서 이용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③ 디지털 기록 생산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종이 문서 중심의 메타데이터와 보존기간 7종에 대한 혁신이 필수적임. 이와 관련한 국가기록원의 로드맵이 있는지 궁금함.

=> (이철편) 메타데이터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메타데이터 체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지만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같이 가야 할 것임. 기록을 중심으로 모든 데이터를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업무와 행위자가 각 개체별로 존재하면서 상호 연관성에 대한 관계성을 획득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많은 연구가 필요함.

=> (박부숙) 보존기간 7종이 너무 경직되고 일부 보존기간 간 격차가 커서 일찍부터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음. 하지만 보존기간은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령 및 표준, 시스템 기능, 기관과의 이해관계 또는 기록물관리기관 간의 역할 변화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백영미) ① 온나라를 중심으로 기록생산과정 전체를 담고자 하는 노력은 오히려 기록관리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음. 온나라 시스템 이외에 행정정보 시스템 등도 별도로 잘 관리하고 상호 연계해서 결과물들을 참조·활용할 수 있는 병렬적인 방법을 제안함.

=> (이철편) 향후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통합검색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함.

②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부담감은 오히려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음. 기록화는 생산자의 주체적인 행위이므로 생산자가 기록화 대상 중 선별할 수 있는 기능 구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철편)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시도가 오히려 기록의 생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함. 하지만 우리가 원칙들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협의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 (윤정훈) ① 국내 기록 생산환경에 맞는 디지털 기록 방법을 개발하고, 해외 및 국내 민간의 유명 상용솔루션·협업 툴의 유용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벤치마킹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② 현실적인 시스템 체계와 전자기록물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때 온나라에서 모든 디지털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는 고민이 필요함.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데이터 형태로 관리하고, 웹사이트와 SNS·블로그 등 웹기록물은 단순 웹페이지 화면 캡처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인 텍스트와 이미지 등 이형의 콘텐츠를 수집·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를 온나라 중심으로 획득 및 관리가 가능할 지 의문임. 다만 의사결정에 중요한 데이터세트를 API로 획득하여 등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음.

=> (이철편) 지금 단계에서는 온나라에서 많은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생산할 때 과제별로 다양한 기록을 모이게 하는 정보 연계 등록방안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데이터세트는 API로 연계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였음.

③ 현행 통합 온나라(2.0)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여러 정보와 데이터를 기록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함. 현행 RMS에서 이관대상은 생산문서, 접수문서, 메모보고, 지시사항, 회의 등 온나라 문서에서 서비스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관기관들과 협의해서 온나라 문서뿐만 아니라 온나라 지식, 온나라 이음의 일부 정보, 데이터 등을 기록으로 포착·관리하는 것도 고민해주시기 바람.

=> (이철편) 인터뷰과정에서 온나라지식이나 이음에는 업무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음. 다만, 온나라이음의 영상회의 녹화파일의 경우 회의기록에 연계하여 등록할 수 있을 것임.

=> (황진현) 온나라 지식의 경우 전체를 기록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업무 담당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혹은 온나라에서 결재받으려고 하는 문서와 직접 연계된 경우에 한해 문서관리카드 내에 정보를 연계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된 파일은 일정기간 중에 다운로드 하고 결재문서에 첨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④ 하나의 화면에서 기록을 생산 등록, 작성된 순서대로 보인다면 기록의 맥락이 한 눈에 보인다는 장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관리카드로 남겨지지 않던 메모보고도 결재문서와 같이 중요한 메타데이터가 남겨

질 것으로 보임. 다만 문서 속성이 다른 문서관리카드와 메모보고의 관리 및 이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⑤ 기존 BRM 단위과제와 처분일정 간 종속성 탈피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제안한대로 공통업무 레코드스케줄은 국가기록원이 총괄하고, 고유 업무에 집합체 단위로 레코드스케줄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함. 하지만 이 경우도 보존기간 책정이 방만해질 수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이 큰 틀에서 지도·점검하고, 각 기관의 기록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다면 시스템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철편) 국가기록원 내부적으로 보존기간 및 기록관리기준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문성·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처분일정 관리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⑥ 공적인 이메일을 궁극적으로 기록화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에는 큰 틀에서 동의함. 다만, 보안을 극도로 중요시하는 국내 환경에서 민간의 상용메일을 써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움. 따라서 중요한 송수신 온메일이나 코리아메일을 기록으로 등록할 것인지를 메일 송수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몇 개 기관 대상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확산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이철편) 이메일 기록관리와 관련해서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고려하여 관리범위를 최대한 축소하여 명확한 것만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인 확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김을지)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국가기록원은 논리적 이관체제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앞으로 물리적 이관체제는 유지하지 않는지 궁금함. 아울러 현재 온나라 시스템에는 이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온나라 3.0으로 될 경우 이관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함.

=> (이철편) 「공공기록물법」상 논리적 이관이 가능하도록 이미 법률이 개정되었고 온나라-cRMS는 논리적 이관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 중임. 다만, cRMS-CAMS는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 있지만 논리적 이관이 가능한 환경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그리고 논리적 이관뿐만 아니라 비전자 문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물리적 이관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함.

○ (이철환) ① 디지털 기록 생산체계와 관련해서 시스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부분도 중요함.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각각의 기록 단위들에 대해서 관리 수준을 따로 설정하고 있지도 않고 심지어 처벌 규정까지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록물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함.

=> (박종연) 이메일 데이터 등이 기록으로 포착될 수 있도록 먼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디지털 기록의 정의를 포함하고, 그 다음 「공공기록물법」 체계 안에 생산부터 처분되는 모든 과정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임.

○ (김현정)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에는 보존기간을 7종 이외에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의 경우 예외 조항으로 적용하여 기관 자체 예규를 통한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있음. 이 해당 조문을 토대로 각각의 공공기관의 규모와 고유업무 특성이 반영된 생산·접수된 기록물에 대해 적절한 보존기간을 적용·책정하는 개선방향을 제안함.

=> (이철평) 법령 상의 예외 규정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반영되는 것으로,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붙임 2

2022년 제1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모습

